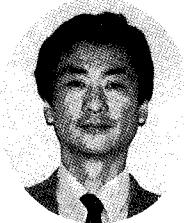


‘環境’ 태풍 극복할 방안은…

—CFC 대체물질개발, 산업구조개편 서둘러야 한다—



姜眞淳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지난 6월 브라질의 해양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백50여개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를 계기로 지금까지 경제 논리에 밀려왔던 환경주의(環境主義)가 세계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각국은 CFC(염화불화탄소, 상품명 프레온가스) 사용증가로 인한 오존층파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현상, 대규모 산림벌채로 생물종의 격감 등 현재의 지구환경오염현상을 방지하다가는 인류가 파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공감,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해 전인류가 공동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1백50여개 국가가 지구환경선언과 실천강령인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에 기꺼이 서명했다.

이제 지구환경보호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명제가 된 셈이다.

이러한 협약 등은 세계경제 질서와 인간의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빵, 자동차, 에어컨, 빌딩 등 윤택하고 편안한

생활에 중점을 둔 경제주의 대신 조금 불편하더라도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산 등 체적한 환경을 강조하는 환경주의가 새로운 대세로 등장하면서 산업구조도 경제성, 효율성보다 환경성을 중시하는 체제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또 우리의 생활도 값싸고 편리한 1회용품, 질감이 매끈매끈한 종이, 말레이시아산 목재 가구대신 1회용품稅 재생용품 할인 혜택 등으로 유리컵 재생 종이 철재 가구를 사용하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의 가솔린기관이 효율성을 무기로 증기기관을 밀어낸 것처럼 알코올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가 휘발유 경유자동차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값싸고 이상적인 냉매로 각광 받았던 CFC사용 에어컨과 냉장고 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서명된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석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폭 줄이자는 얘기로 이를 위해 각국이 석유 석탄사용량을 '90년에 사용한

으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또 생물다양성협약은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막기위해 서식지인 열대우림 등을 적극보전하고 그 댓가로 이들 야생동식물을 독점자원으로 인정, 유전공학에 이용할때 사용료를 지불하자는 것이다.

산림보전의정서는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남미의 아마존밀림과 동남아 정글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자는 것이며, 수산자원보호의제는 어류자원보호를 위해 공해(公海)상의 어로행위를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들 내용은 지구환경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이를 실천하는데 각국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려움이 훨씬 클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협약의 경우 경제발전을 위해 석유 석탄의 사용이 매년 14~15%씩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90년수준으로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산업계에 엄청난 고통을 불러 일으킬것으로 예상되며 생물다양성보호협약은 야생동식물의 種이 풍부하지 못한데다 유전공학기술이 걸음마 단계인 우리로서는 유전공학기술도입료 등이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림보전의정서에 따른 벌채제한으로 말레이지아, 필리핀 등에서 수입하는 원목값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공해상의 어로행위가 제한되어 원양

몇년의 경과기간후 발휘될 제재수단은 주로 수입금지, 환경관세 등 경제적제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협약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다.

어업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대체물질을 개발하지 못한 CFC도 비엔나협약과 부속의정서인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돼 국내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협약들은 지금 당장 강권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겠지만 1년이내에 서명국들이 모여 부속의정서를 채택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강력한 제재수단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몇년의 경과기간후 발휘될 제재수단은 주로 수입금지, 환경관세 등 경제적제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협약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주의 태풍에 맞서 경과기간안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석유 석탄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

하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에너지低사용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기업은 탄소세(炭消稅) 도입 등에 대비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하는 한편 에너지체계를 석유·석탄 등에서 LNG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 태양열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 보급과 석유를 사용하지 않은 무공해자동차의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며 대기오염저감기술, 이산화탄소포집기술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대비해서는 경과기간안에 유전공학기술의 축적과 함께 자연 및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등의 확대로 국내 야생동식물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이와함께 원목값 상승에 대비, 대체재료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내연안의 수산자원보호대책도 요구된다.

또 CFC대체 물질개발은 연4조원에 달하는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스치로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물질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 비싼 값을 내고 외국대체물질을 수입해다써야 할 실정이다.

국민들도 1회용품의 사용자제와 재생종이 등 재생용품의 구매 등으로 환경주의 태풍의 방화제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결국 계속적인 경제성장여부는 온국민이 합심, 거센 환경보호주의 격랑을 얼마나 잘 타 넘느냐에 달려있다. ◀